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30
----------	------

제출일자 : 2014. 9.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료 등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7조(사용허가) 제6항” 삭제

-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나. “제18조(사용허가 취소)” 관련 조항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 적용

다. “조례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 관련 조항 개정

- 사용료 등 반환기준(별표 2)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제1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8. 4. ~ 8. 2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 관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 관장은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21조와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정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수강을 할 수 없거나 사용·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한 경우	사용 또는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사용·수강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액
		총 사용·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사용·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 또는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총 사용·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사용·수강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액
		사용·수강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사용료 등(사용·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사용료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사용·수강시간은 사용·수강기간 중의 총 사용·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사용·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명칭 및 위치) <u>대구광역시 달성군</u> <u>면민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u> <u>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u></p> <p>제17조(사용허가) ①~ ⑤ (생략) ⑥ <u>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u> <u>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u></p> <p>제18조(사용허가 취소) ① <u>관장은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u> <u>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u> <u>변경할 수 있다.</u> 1. <u>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u> <u>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u> 2. <u>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u> 3. <u>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u> <u>불가능 할 때</u> ② <u>제1항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 제</u> <u>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u> <u>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u> <u>한다.</u></p> <p>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 <u>납부한 사용료</u> <u>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u> <u>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u> 1. <u>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u> <u>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u> 2. <u>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u> <u>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u> 3. <u>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는</u> <u>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u></p>	<p>제2조(명칭 및 위치)----- ----- <u>별표1과</u> -----.</p> <p>제17조(사용허가) ①~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p> <p>제18조(사용허가 취소) <u>관장은 「공유재산</u> <u>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u> <u>한다)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u> <u>정한 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u> <u>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u></p> <p>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 <u>관장은 사용허</u> <u>가의 취소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u> <u>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2의 구분에</u> <u>따라 반환하여야 한다.</u></p>

조문대비표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